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용국가 기반 구축 국민고통 덜기 최선”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어와 기업 지원·보호정책에 총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이 고통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수준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과 속도감 있는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업종 종사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원 구성’ 또 시한초과… 12일까지 추가협상

13대 국회 이후 ‘지각개원’ 반복 與野, 법사위원장 자리다툼 여전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13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지각 개원’을 반복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은 이달 8일까지다.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미래통합당 입장을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로 오는 12일까지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8일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해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그러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전날(8일)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정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를 열고 위원회별 정당 의석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10일까지 21대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확정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가 마련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갈등이 이어질 경우 원 구성 협상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9일 통합당을 겨냥해 ‘빠른 시일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일하는 국

회, 책임 국회를 기다린다. 통합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은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해달라는데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임위원 정수와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데 따른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전 상임위원 배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꼬집은 발언인 셈이다.

/최영훈 기자

과기정통부, 소재·부품 대외의존도 해소 연구착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출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년 100대 핵심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근본적 대외의존도 해소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모은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의 9개 연구단이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정병선 차관과 공공연구기관장, LG전자, 아모그린텍, 한양대 등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는 기존의 소재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도전적 목표와 혁신적 수행방식을 도입, 반도체·디스

플레이·자동차 등 분야 100대 핵심품목의 조속한 자립화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06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사업기간 5년 내 개발된 기술에 대한 대형 기술이전을 완료, 연구단별 10억 원 이상 기술료를 확보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응용→개발로 이어지는 소재연구 파이프라인의 가교이자 산학연 융합 거점인 공공연구기관을 총괄기관으로 정책지정, 수요·공급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융합연구단’을 운영한다.

또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발이 아닌, 개발된 소재를 활용한 공정과 시스템 구현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해 기술 완성도도 높이기로 했다.

출범식에서는 사업의 취지와 의의 및 연구단별 연구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연구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이 개최됐다.

또 소재·부품 R&D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소재·부품 R&D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올해 3360억원을 투자해 신산업·신시장 대응 미래준비 R&D와 주력산업 기술자립 R&D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내년에는 소재연구 혁신 기반 고도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급식중단’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농식품부·교육부, 499만명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가와 급식업체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바우처 등을 지급해 농산물 3만7000톤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 학생 499만명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바우

처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돼 추진됐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해 전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한용수 기자 hys@

수산물 간편식품 개발 글로벌시장 개척

해수부, 낚치 활용 어묵전병 등 9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산물 간편식품을 개발해 해외 현지 편의점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해외 간편식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대표 양식 수산물인 낚치를 활용한 어묵전병, 간편 조리 가능한 고등어조림, 참게가리장국과 명란 병조림, 저염 오징어젓갈, 냉동굴 천연 조미제품 등 올 한해

총 9종의 신규 간편식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 수산식품은 맛과 영양이 우수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상온에서 쉽게 상하는 수산물 특성과 복잡한 조리과정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에는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식품업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수산물 간편식품을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용수 기자



수산물 간편식 홍보 포스터 /해수부